

권두언

올해 말에는 마스크를 벗고 제한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을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세계 각국에서 본격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율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변이가 계속 새롭게 발생하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면역 우산’ 형성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27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전세계 인구의 22.6%인데, 저소득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인구의 0.9%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세계에 충분히 공급되게 하고 저소득국의 시민들도 부담 없는 비용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 생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특허의 유예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이사회에서 백신의 특허권 유예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채택될지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생명권과 건강권, 즉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기본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6월 14일 성립되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작년 6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을 예방·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

근 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을 없애는 것은 어떤 공정 담론에서든 기본일 것입니다. 공정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제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꼭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에 이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국경을 넘는 인권의 연대를 요청하는 팬데믹의 시대, 국내에서 공정과 평등의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시점에 발간되는 <인권연구> 이번 호에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 논문들이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온택트 경험을 통해 살펴본 정보격차 연구”(김현숙·황혜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사회·경제적 활동이 전면화된 이 시기에 사람들은 비대면 온택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정보 인권의 관점에서 질적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적지향에 기초한 차별에 관한 연구”(김태환)는 국내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성적지향에 기초한 차별의 개념과 공·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실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 ‘관할’의 의미와 초국경적 인권문제를 중심으로”(신윤진)는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인권 의무 범위에 대한 영토중심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보편적이어야 할 인권 보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자국의 국경 밖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인권의무, 즉 역외 인권의무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에 대한 교차성 페미니즘적 독해”(정정훈)는 성소수자, 이주민,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억압이 장애여성이라는 자신들의 억압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운동의 과제로 삼고 있는 장애여성공감의 여성주의적 실천에 주목하면서, 이를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통해 의미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은 각각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온택트 시대 정보격차의 해소, 국경을 넘어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의 발전적 해석, 차별금지와 소수자들의 연

대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논문을 투고해 주신 저자 선생님들, 심사위원님들, 송기춘 편집위원장님과 모든 편집위원님, 김민성 편집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권연구>는 “국내외 인권현안을 소개하고, 인권기준을 제시하며, 소외된 인권의제를 발굴하는 등 현장을 바탕으로 이론적·실천적 담론”을 생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권연구>가 인권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논의를 증진시키면서 인권 발전에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활동가, 실무자, 법조인들께서 좋은 글을 <인권연구>에 투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6월
한국인권학회 회장 이주영 올림